관계부처합동 보도자료 대체불가 대한민국

보도시점 배포 후 즉시 사용 배포 2026.11.18.(수)

“수능 부정행위, 결코 용납하지 않겠습니다” 범정부, 모든 역량 총동원

- 첨단기기 악용한 부정행위 차단-적발-제재 위해 범정부 역량 총결집
- 수능 종료 후에도 부정행위자 예외없이 적발·처벌 등 위해 범정부 지속 협력

□ 정부는 11월 19일(목)에 실시되는 **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앞두고** 지난 11월 17일(화)에 **대통령 주재 비상점검회의**, **국무총리 대국민 담화** 등을 통해 **AI 기술을 악용한 부정행위**로부터 오랜 시간 성실하게 노력해온 **수험생들이 공정하게 평가**받을 수 있도록 **정부의 모든 역량을 총동원**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.

< 주요 대책 및 조치 현황 >

1. 시험장 점검·감독 강화로 부정행위 원천 차단

① 초소형 카메라 등 스마트기기 차단

□ 정부는 초소형 카메라를 활용한 부정행위 발생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**흑색 연필을 제외**한 **모든 필기구**를 **휴대 금지 물품**으로 **지정***하였다

* 당초 소지 가능 필기구였던 ▲검은색 컴퓨터용 사인펜 ▲흰색 수정테이프 ▲지우개 ▲샤프를 1인당 1개씩 일괄 지급 (샤프심은 교실당 30개입짜리 5개 비치)

※ 관련 사실을 모든 수험생에게 문자로 안내 완료

○ 이를 위해 수험생(약 55만명) 사용에 차질이 없도록 **해당 필기구***를 모든 시험장에 **시험 전까지 배부**되도록 조치한다.

* ▲지우개 700,000개 ▲샤프심(30개입) 77,040개 ▲수정테이프 663,540개

□ 또한, 단추 등에 초소형 카메라를 부착하는 경우에 대비하여 모든 시험장에 **스티커**가 **차질 없이 비치**되도록 **준비**하였다.

※ 1교시 시작 전 감독관은 단추가 부착된 옷을 입은 수험생에게 스티커를 배부
※ 초소형 카메라 및 스마트안경 확인할 수 있도록 全 감독관 대상 행동요령 교육 완료

② AI 활용 차단

□ 정부는 **미제출된 스마트기기 식별**을 위해 시험일에 **위급재난문자**를 **발송**한다.

* (1차) 08:30 (2차 이후) 불시

※ 전자기기를 소지하거나 제출하지 않고 가방에 보관한 모든 수험생은 즉시 부정행위 처리

※ '위급재난문자'는 수험생뿐 아니라 전국의 모든 국민과 국내 체류 중인 외국인의 휴대폰에 발송됨 → 혼란 최소화 위해 병원, 요양시설, 교통시설(철도, 항공, 버스, 지하철 등), 발전사를 포함한 위험시설 등에 사전에 TV 자막방송, 전광판, 안전 안내문자·방송, 국내 주요 포털 사이트 배너 등 활용하여 사전 안내 예정

□ 초소형 카메라·이어폰 등과 스마트기기 간의 연결을 제한하고, 스마트기기를 효과적으로 탐지하기 위해 **수험생 가방을 복도**에 보관하도록 하고, **복도에 추가 감독관**을 **배치**한다.

○ **복도 감독관**은 위급재난문자에 반응하는 스마트기기 식별 뿐 아니라, 와이파이 등 별도 수단으로 AI를 활용하는 경우에 대비하여 **와이파이 신호**를 **지속적으로 탐지**할 예정이다

※ 복도 감독관 대상 스마트폰 확인 및 와이파이 신호 점검에 관한 매뉴얼 마련·배포 완료

2. 부정행위자 철저 조사 및 무관용 원칙에 따른 엄정 조치

① 시험 중 부정행위 적발

□ 정부는 부정행위 신고센터 등에 신고·제보한 사안이 부정행위로 확인될 경우 **최대 1억원의 포상금 지급**을 추진할 계획이다

* 관련 규정을 신속하게 마련하여 **이번 수능부터 즉시 적용 추진**

□ 또한, 감독관들이 **민원·소송 등에 대한 부담**에서 벗어나 **적극적으로 이상 행동을 탐지**하는 등 **부정행위를 적발**할 수 있도록 **정부가 모든 책임을 부담**한다.

② 부정행위자 처벌 강화

□ 올해 수능에서 부정행위자로 확인되면 **향후 10년간 응시자격을 제한할 예정이다.** 이를 위해 정부는 **국회와의 긴밀한 논의**를 통해 법률 개정을 조속하게 추진하여 **올해 시험부터 즉시 적용**할 계획이다.

□ 이울러, **수사의뢰·고발을 통해 형사 책임(최대 5년 이하의 징역)**을 묻는 한편, 대학 **재학생 부정행위자**는 해당 대학에서 **퇴학조치**를 할 예정이다.

□ 또한, **불법사실을 인지**하면서도 **부정행위에 활용 가능한 스마트기기**를 **판매**하는 **사업자**와 **구매자**에 대해서도 **철저히 조사**하고, 관련 법과 규정에 따라 **엄정**하게 **조치**할 계획이다.

< 향후 계획 >

□ 정부는 **수능 시험 종료 후에도** 혹시나 발생했을 수도 있는 부정행위를 예외없이 적발하기 위해 **수능 시험 직후(11.20) 국무총리를 반장**으로 하는 **'범정부 수능 부정행위 대응 TF'**를 **본격 가동**할 계획이다.

* 구성(안) : **국무총리(반장)**, 교육부장관(간사), 과기부총리, 법무부장관, 행안부장관, 경찰청장 등

○ TF는 **관계부처** 및 **글로벌 AI 기업·통신사** 등과 **협력**하여 부정행위 의심 사례를 **철저히 조사·적발**하고, 부정행위가 확인될 경우 무관용 원칙에 따라 **형사·행정적 제재 조치**를 **엄정히 시행**하는 한편, **신고·제보 및 민원 처리** 등 **사후 대응**에도 **만전을 기할 방침**이다.

□ 총리실, 교육부 등 관계부처는 "**부정행위자**는 **반드시 적발**되고, 끝까지 예외없이 행정적·형사적 **책임을 지게 하겠다**"는 **확고한 원칙** 아래, 내일(11.19(목)) **수능 시험 시간** 뿐 아니라 **시험이 종료된 후**에도 **가용한 범정부 역량**을 **총결집**할 계획이다.

○ 아울러, **강화된 점검과 감독** 조치로 인해 **수험생**과 **국민**께서 겪으실 수도 있는 **불편과 혼란을 최소화하기** 위해 시험이 종료되는 마지막 순간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, **모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빈틈없이 대응**할 예정이다.

담당 부서	국무조정실 교육문화성평등정책관실	책임자	팀 장 형성희 (044-200-2321)
		담당자	사무관 송지애 (044-200-2323)
담당 부서	교육부 대입정책과	책임자	과 장 신진용 (044-203-6885)
		담당자	사무관 이준혁 (044-203-6890)

대한민국 정책브리핑
대체불가 대한민국
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